

【학술대회 참가기】

## 냉전과 탈냉전의 착종, 그리고 동아시아의 규정된 정체성(들)\*

박 우\*\*

지난 9월 19일, 나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사업단이 주최한 국내학술회의에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원광대는 물론 익산이 초행길인지라 가기 전날 구글지도를 통해 지리를 확인하기도 했다. 용산역에서 출발한 KTX는 약 90분 뒤에 익산역에 도착했다. 개찰구는 역 출입문으로 이어졌고 밖에는 바로 택시승차장이 있었다. 원광대까지는 10분 정도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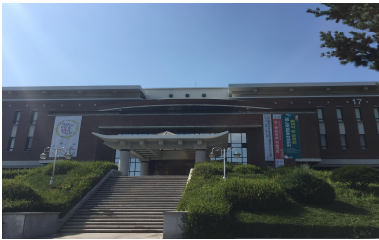
늦여름과 초가을의 애매한 계절만큼 날은 덥고 하늘은 높고 맑았다. 정문에서 캠퍼스 내부로 이어진 길은 녹음이 우거졌고, 학교의 상징물인 봉황조형물에는 “대봉찬大鳳讚”이 새겨져 있었다. 봉황 옆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귀여우면서도 묵직한(?) 목교가 연못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학술회의는 승산기념관에서 열렸는데 나는 시간 여유가 있어 회의장을 향하지 않고 짧은 캠퍼스투어를 가졌다. 나는 학교 내부로 들어갔고, 학생들은 나의 반대 쪽으로 나갔다. 자연스레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쪽을 향하였는데, 걷다보니 정갈한 호수水德湖가 나왔다. 수덕호는 중앙도서관을 끼고 있었고, 정중앙에는 아담한 카페가 자리했다. 호수 주변의 나무가 단풍 들면 묘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질 법한 곳이었다. 수덕호에서 대운동장을 지나 직진하면 봉황탑을 정중앙에 위치한 광장이 있다. 학생회관이 위치한 곳이어서 그런지 학생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학술대회, “동북아시아 초국경적 협력과 도시 간 교류: 역사, 현실, 그리고 미래”(2019.9.19.).

\*\*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교육원 조교수.

들이 많이 보였다. 봉황탑 옆에는 대학교박물관인데 마침 원광대박물관 소장 대곡사명감로왕도가 보물 제1990호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박물관 맞은편이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송산기념관이었다. 학술회의는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건물의 중앙계단은 분리형으로 설계되어 1.5층 위치부터 양측으로 갈라져 2층에 올라가는 구조였다. 계단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는데 외벽은 대형스크린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트와이스가 노래하고 있었다.

국내 여러 대학교가 수행중인 HK+사업처럼 이 학술회의도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특정 주제를 논의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나는 HK+사업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원광대학교 전경

학술회의의 대주제는 “동북아시아 초국경적 협력과 도시 간 교류: 역사, 현실 그리고 미래”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원광대 HK+사업은 21세기의 초국경(가)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염승준 소장은 개회사에 “근현대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갈등과 협력, 단절과 교류가 오랜 기간 중첩되며 교차해 온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냉전, 그리고 탈냉전의 시기를 거치며 동북아시아 각국은 반목과 경쟁, 연대와 협력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탈냉전의 도래로 이념에 따른 대립은 종식되었지만, 그 자리에 국민국가 간의 갈등이 대두되었습니다. 각국 간 영토, 경제, 역사 등을 매개로 한 분쟁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저해하는 주요한 위협이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동북아시아 공동

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상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연구소는 “‘동북아시아 다이멘션(NEAD)’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도시를 매개로 한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축 전략을 모색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했다.

학술회의는 기초강연 1편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지역협력의 모색”(이남주 발표, 정규식 사회), 제1부 “동북아시아 역내 교류와 갈등의 역사”(유지아 사회)와 제2부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체의 현실과 미래”(천춘화 사회)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오키나와의 이중정체성과 차별적 시선의 조우: 1970년대 계절노동자를 중심으로”(신현선 발표, 이윤주 토론), “냉전과 민족주의의 교차: 1970년대 동북아시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도미노”(조수룡 발표, 김동혁 토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대학들의 동아시아 ‘개발’ 사업의 의미: 농지개혁과 Land Grant Colleges의 관계를 중심으로”(한봉석 발표, 이동원 토론) 등의 3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제2부는 “초국경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인문학적 자산의 활용과 도시의 역할: 독일 북동부 도시들의 사례를 중심으로”(박해남 발표, 권요용 토론),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노동의 구조변동: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노동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정규식 발표, 하남석 토론),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협력의 경험과 함의: 1980년대 이후 연변을 중심으로”(박우 발표, 윤종석 토론) 등의 3편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초국경적 협력과 도시 간 교류라는 주제는 먼저 동북아 질서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조명에서 시작되었다. 이남주는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현재적 수준에서 추진 가능한 지역협력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51에 체결된 연합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전후 냉전체제의 시작이라고 한다. 이 조약을 토대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축으로 삼아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확산을 저지하는 동북아전략을 추구

했다. 이 체제는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정상화 되면서 “미국 우위 하의 미중협조체제”로 변화하였고, 샌프란시스코체제에서 배제되었던, 그리고 봉쇄의 대상이 되었던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질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남주가 글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평풍외교, 정상회담, 국교정상화 등은 1970년대 말 중국의 탈사회주의를 가능케 한 외교적 보장이기도 했다.

이남주는 1970년대에 구축된 체제로 미국은 중국이 자유주의로 전환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1989년의 천안문사건과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로 인해 미국은 자신이 취했던 기존의 스텐스를 재고했다고 한다. 경제적 자유화가 정치적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리버럴의 가설이 기각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2000년대에 대 중동 전략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자신이 짠 구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중국의 협력을 오히려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남주는 1990년대 미국에 등장한 “중국위협론”이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동북아 지역의 기존 체제를 흔드는 요인은 중국 외에 북핵문제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변수도 있었다.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동은 2010년대에 접어들어 더욱 크게 격변한다. 이남주는 중국경제의 미국 추격이 빨라지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격상되었다는 것, 북핵과 미사일 성능이 고도화 되고 한반도 주변 안보 갈등이 증대한 것,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영토를 둘러싼 인접국간의 갈등이 증가한 것을 등을 예로 들었다. 정리하면, 전후 냉전구도를 미소 중심의 양대 진영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상 지엽적인 지리적 영역에서 갈등요인들이 꾸준히 존재했고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남주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초국경적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남주는 지역 갈등이 지엽화 됨에 따라 지역협력 역시 기존의 대다자협력에서 소다자협력으로 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남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동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차원의 포괄적 다자협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자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 원칙과 방향의 선언을 넘어서기

어려운 방식의 다자협력보다는 효과가 분명한 다자협력을 다원적, 다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대다자협력에서 소다자협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제1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원광대의 신현선이 맡았다. 냉전기 아태지역의 자유주의 진영 최전방 중 하나였던 오키나와에 관한 발표였다. 그는 일본 본토와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던 오키나와인(남성)이 타이완과 한국의 여성노동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가해자가 되었는지를 관찰했다. 신현선의 말을 빌리자면 “오키나와는 현대 일본의 모순이 집약된 장소이다. 위선적인 ‘평화’ 구축에 기만당하고 있는 역설적 평화의 섬 오키나와는 지배/피지배라는 식민지배의 불편한 위계적 구조와 불편한 역사인식이 내장되어 반복되는 곳이다. 일본을 이해하는 화두이자 일본이면서도 일본이 아닌 오키나와는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제국의 억압과 차별의 당사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의 등장으로 또 다른 억압과 차별이 작동한 지역이었다.” 신현선은 두 편의 소설을 선정했다. 한편은 메도루마 숲(目取真俊)의 “어군기(魚群記)”(1983)이고 다른 한편은 김정한의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1977)다.

신현선은 “어군기”에서 오키나와 북부의 작은 농촌에 있는 파인애플 통조림공장에 고용된 타이완여공을 바라보는 오키나와 현지인(주로 남성)의 시선에 착목했다. 그에 의하면 “타이완 여공을 지칭하는 ‘타이완이나구(台灣女)’로 불리는 ‘그 말에는 멀시와 외잡한 울림이 내장’ 되어 있었다.” 소설속의 오키나와 남성들의 부모님은 타이완 여공을 멀리하라고 경고했지만 ‘형’은 당당하게 여공과 만남을 즐기고, ‘나’ 역시 타이완 여공에게 성적 호기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현선이 인용한 곽형덕의 연구를 재인용하자면 “타이완에 대한 식민주의 지배자의 시선은 오키나와에 전도되어 타이완인 계절노동자를 향한 차별적 시선을 배태한다. 이러한 차별적 시선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조차 타이완 여공과 밀애를 즐겼다는 사실이다. 결국 모두가 타이완인 여공에 성적인 욕망을 품고, 그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 주체

(가해자)들이었다.” 신현선은 이를 요약하여 “표면적으로는 혐오의 대상, 비하해마지않던 경계의 대상이었지만 오키나와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자격의 당위성을 가지며 위계구조를 명확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1972년 일본은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했다. 타이완은 오키나와에 여성노동력을 송출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었던 사탕수수, 파인애플 산업은 피해를 입게 된다. ‘국제기능개발협회’라는 증개기구가 이 틈을 타 출현했고, 한국으로부터 여성노동력을 오키나와에 유입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강원도 황지 탄광촌 출신의 처녀 복진이 이 협회의 알선으로 오키나와 미나마이다이토지마(南大东岛)의 사탕수수 농가에 계절노동자로 취업했다. 복진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는 “어머니께선 그때 대동아전쟁 당시에 여자정신대라 해서 우리나라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던 얘길 하시면서 몹시 걱정을 하셨지만, 이번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사탕수수를 베는 게 일입니다”고 적혀있었다. 신현선은 “계절노동자 취업 형태는 식민지 지배구조의 재현이자 차별 양상이 복합적으로 주입되어 발현된 구조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고 한다. 두 편의 소설에 착목한 신현선은 1970년대 타이완인 및 한국인 여성 계절노동자의 삶을 목도하는 가운데 식민주의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오키나와에 내재된 차별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그는 ‘연동하는 동아시아의 상황을 조망하는 것은 차별받는 소수자들과의 공감과 연대를 모색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제안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표는 원광대의 조수룡이 맡았다. 조수룡의 발표는 해양경계인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어떻게 출현했고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정리했다. 그는 EEZ 출현의 배경에는 1950년대 “제3세계”로 대표되는 주변부 국가가 반제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형성된 특유의 민족주의와 집합정체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주변부 국가의 민족주의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구도와 다양한 충돌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이념(노선)논쟁을 이어갔던 소련과 중국이 결국 전바

오염에서 무력으로 충돌한 것(1969.3), 1973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한 것, 1969년 리비아에서의 알 카다피(Muammar al-Qaddafi)의 쿠데타, 1970년 캄보디아의 폴포트(Pol Pot)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Khmers Rouges)와 론 놀(Lon Nol) 정권 사이에 내전이 발발한 것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했다. 조수룡은 이러한 투쟁은 대체로 각지에서 민족 해방투쟁과 비동맹운동이라는 정치적 연대로 현상하였고, 실제로 냉전이라는 양극적 질서 하에서 새로운 정치공간을 형성했다고 한다. 조수룡은 소위 “정치공간”을 “특히 이들 제3세계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국제 레짐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구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것은 비동맹운동이 강대국 정치에 대한 비판과 반제국주의 운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라는 자기규정에 부합하는 주요 행위자로 등장함을 의미하였다. 1982년 채택 당시 UN이 수행한 가장 큰 국제 입법 시도였던 해양법 제정과정에서의 활동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제3세계는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였고, 실제로 이를 해양법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자리잡게 하였다. 이 해양법의 제정은 제1세계와 2세계, 3세계의 이해관계가 충돌, 조정되는 투쟁과 협상의 과정이었다”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EEZ는 어떻게 출현했나? 제2차세계대전 이전까지 해양법은 여타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관습법이었다. 해양법 체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1945년의 ‘트루먼선언’이 되겠다. 이 선언에서 소위 ‘보존수역(conservation zones)’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개념이 EEZ의 기초가 된다. 트루먼선언은 “대륙붕의 지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의 정책”, “공해 수역에서의 연안 어업에 관한 미합중국의 정책” 등을 포함했다. 전자는 자국 연안에 인접한 수심 200m까지 대륙붕의 자원이 자국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후자는 자국 연안에 인접한 공해상에 ‘보존수역’을 설정하여 어족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규정했다. 당시 미국은 이 선언을 통해 영해 3해리를 넘어선 인접 해역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선언은 대륙붕 상공은 공해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했고, 상

부 수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강조했다.

조수룡은 미국이 이 선언을 발표한 목적은 해저 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지, 영해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영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해상에서 항해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른바 ‘자유해양론’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트루먼선언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아르헨티나(1946), 칠레와 페루(1947), 코스타리카(1948) 등은 12해리 또는 200해리 경계를 선언하면서 대륙붕과 그 상부수역을 포함하였고, 엘살바도르(1950)는 200해리 보호수역을 선언하면서 대륙붕과 상공까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시켰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트루먼선언과 다른 해양경계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 조수룡은 “상대적으로 좁은 대륙붕 등 개별적 특성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양 강국들의 주변 수역 진출에 대한 방어 논리였다”고 보고 있다. 이후 1950-60년대, 인도양과 대서양 연안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였고, 반동회의로 대표되는 제3세계가 등장한다. 이들은 국제무대에서 이른바 EEZ를 제안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와중에 소련이 1976년에 200해리 “배타적 어업 수역법”을 제정, 1977년에 “배타적어업수역(Exclusive Fishery Zone: EFZ)”을 선포했다. 이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CC)가 북해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 미국 또한 1977년에 200해리 어업수역 실시를 예고한다. 조수룡의 글에 따르면 소련, 유럽, 미국의 해양경계가 동북아시아 해양경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듯하다. 특히 소련의 해양경계는 지구 반대편 일본을 자극했다. 일본은 신속하게 영해법과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제정, 1977년부터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어업수역을 시행하였다. 일본의 해양경계 설정은 동북아시아의 한국, 북한, 중국 등 국가의 해양경계 설정 도미노를 불러오게 되었다. 발표는 동북아 국가의 해양경계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후 연구로 미루며 마쳤다.

세 번째 발표는 이화여대 한봉석이 해주었다. 한봉석의 글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어떻게 아시아 저개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관여하였는

지에 대한 글이다. 봉건제에서 식민지를 경험했던 많은 아시아 국가는 전후 국민국가 건설의 첫 번째 사업으로 농지개혁을 선택했다. 이 국가 중에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국가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 자유주의 진영의 아시아 국가가 사회주의 진영의 농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불편했다. 한봉석에 의하면 그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토지개혁을 수반하는 과정은 생산수단을 공유하거나 혹은 그 전단계를 수행함으로써 ‘인민’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평등한 감각을 만드는데 큰 목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또한 냉전 초 이른바 ‘자유주의’ 블록을 안정화시키고, 새롭게 탄생할 ‘시민’을 탄생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주의 블록의 경우처럼 토지개혁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토지개혁을 통한 근대 국민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면 무엇인가? “미국은 저개발국 일반에서 농지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현지의 사정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였고, 더구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농지개혁의 진행에 있어서는 수동적 면모를 보였다… …그 결과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저개발국들에 대한 ‘기술협조(technical cooperation)’ 프로그램들이었다. 이는 저개발국의 보건, 위생, 농업분야에 대한 기초적 원조를 통한 사회안정화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즉 냉전의 후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누가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는가?

한봉석은 이 사업의 최전선에는 모릴법대학(Land Grant Colleges)이 있다고 했다. 전후 미국의 저개발국 원조 사업 당시 트루먼 행정부를 크게 지원했던 사람이 기술협조처(Technic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초대 처장이었던 헨리 베넷이라는 사람인데, 당시 그는 미국 내 모릴법대학협회의 학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한봉석의 원문을 빌리자면 “모릴법 대학의 태생은 미국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기초적인 공업 및 농업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1862년 미국 정부는 주단위의 교육강화와 농공분야의 숙련기술자 육성을 목표로 ‘모릴법(Morrill Land Grant College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의 핵심은 미 정부가 각 주에 국유지를 제공하는 대신 이들 각주는 이 토지에서 획득된 재원을 바탕으로 최소

한 1개의 대학을 지원, 유지하고 농업과 기계분야에 관련된 학문을 가르쳐야 한다는데 있다.” 바로 이러한 태생적인 기능적 강점으로 모릴법대학들은 전후 동아시아의 개발에 바로 투입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대학교들은 동아시아 국가에 획일적인 내용으로 기술지원을 한 게 아니었다. “경제개발 및 산업화에 있어 핵심적인 지식, 기술이 지원되는 지역은 일본…농업 및 공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과 내실이 분명한 곳이 대만…한국에 대한 지원은 거의 기초적인 분야에 국한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 대학들이 1950년대 일본에 설치한 생산성 본부 등을 조장하기 위한 노력은 1960년대 이후야 한국에 재현된다. 농업에서 주종은 거의 방기되었고, 농지개혁의 대안이라는 애초 설정이 무색하게, 농정 기술은 주로 채소류에 집중되었고, 주종인 쌀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다고 엔지니어링 분야가 강조된 것도 아니었다. 한국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대만 및 일본에 비해 그 기술적 제한이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었다.” 모릴법 대학의 이러한 선별적인 동아시아 정책은 1960년대 이후 다른 양상으로 변모한다. “저개발국의 과제는 농지개혁이 아닌 인구조절과 영양학의 문제로 치환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아시아 국가들이 제시했던 ‘근대화’ 내용은 미국이 제시한 내용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제2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원광대 박해남이 맡았다. 박해남은 2019년 2월과 7월 두 번에 걸친 유럽현지조사 결과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초국경적 지역협력의 비교 사례로 유럽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그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어두운 과거를 넘어 지역 시민들의 사이의 대안적 지역주의에 기초한 초국경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다양한 실천들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지만 그 미래가 밝다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류가 다양한 장해 요인에 부딪힌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박해남은 도시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도시는 기억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경험 등을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이를 확산시켜 집단기억을 만들기 위

한 다양한 기억의 장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민국가의 역사쓰기에 비하여 도시의 역사쓰기는 상대적으로 교류와 이산의 역사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국민국가가 그 특성상 정체성과 경계의 문제와 긴밀히 결부된다면, 도시는 이동과 흐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시의 “초국경적” 교류협력의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인가? 박해남은 독일 북동부에 소재한 두 도시 뤼벡과 뤼네부르크를 선정했다. 그 이유는 이 두 도시가 함부르크와 함께 과거 한자동맹의 주축을 이루었고, 2차 대전 이후 동독과의 경계에 맞닿은 서독의 도시들이었기에 다양한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이 도시들의 역사에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박해남이 답사한 뤼벡을 먼저 살펴보자.

한자동맹은 북해 및 발트해 연안의 항구도시들을 기반으로 한 상인 및 도시네트워크로,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존속했다. 상인 길드이자 상업도시동맹이라 할 수 있는 한자의 성격은 매우 독특하다. 이 조직은 광범위하게 산재한 해양 도시들 간의 느슨한 네트워크였다. 상설 집행기관이 없었고 어디까지가 한자동맹에 소속해 있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박해남은 이런 의미에서 “한자동맹은 상인들 및 도시들 간 초국경적인 교류와 협력의 선례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자동맹의 역사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등장과 함께 국민국가의 군사력 및 제국주의적 확장과 연결되어 해석되었다. 1920년대 나치시대, 한자동맹의 역사는 국가사회주의의 여러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었다. 독일 패전 이후 한자동맹의 역사는 다시 변용되었다. 국사로서 한자에 대한 연구는 쇠퇴했고, 대신 뤼벡, 함부르크, 브레멘처럼 한자도시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공간들이 한자동맹의 역사를 지역화했다. 도시들은 한자동맹을 전후민주주의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특히 뤼벡에서는 2000년대 이후 초국경적인 교류와 협력의 전례로 기억되기 시작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초국경적 교류와 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 자산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뤼벡은 초국경적 네트워크로서 한자동맹을 부각하기 위해 1980년에 신한자동맹을 결성, 유럽한자박물관 건설(2010년 착공, 2015년 개장), 한자도시 문화예술네트워크 구

축(2011년 시작) 등 사업을 시작했다.

두 번째 답사 도시인 뤼네부르크를 보자. 박해남은 “이산(diaspora)”이 뤼네부르크의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1945년 당시 18,000명에 불과했던 뤼네부르크의 인구는 피난민, 강제이주자, 인근 대도시로부터 온 이주자들로 인하여 80,000-100,000까지 늘어났던 것이다. 뤼네부르크는 “작은 동프로이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로 구성된 뤼네부르크는 어떻게 그 기억을 활용할까? 박해남은 뤼네부르크의 동프로이센발물관의 역할, 북동연구소의 역할을 통해 이 지역의 정체성은 노스텔지어에서 유럽정체성으로 재구성된다고 했다. 이런 기관들은 “국민국가가가 제공하거나 권장하는 기억이 아닌 ‘지역의 기억’을 형성하는데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초국경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는 원광대 정규식이 맡았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쟁분야 중 하나인 생산네트워크의 변화를 조명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변화의 핵심 변수로 자리한 중국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이를 추동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주요 특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노동관계의 변화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정규식에 의하면 “통합된 세계경제 시스템에서 ‘산업-노동-지역’의 동시적인 구조변동은 더 이상 일국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국가는 여전히 노동관련 정책 및 제도화, 산업 및 기술관련 정책, 해외투자 등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갈등과 협력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와 노동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아주 공격적으로 4차산업혁명에 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산업디지털화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발전에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의 근간은 제조업인 만큼 중국은 동시에 거국적 차원에서 제조업을 발전할 것을 천명했다. 정규식의 원문을 인용하면 “중국은 ‘중

국제조 2025' 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3단계 목표와 10개의 중점분야를 선정하였다.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10개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고도화를 통해 2035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추격하고, 2045년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제조업에 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중국은 “대표적인 4차산업혁명 전략으로 '인터넷 플러스'를 들 수 있는데 이 정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인터넷을 주력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과시한 분야가 이미 출현했는데 그것인 즉 “모바일-온라인 결제, 공유경제, 인공지능, 전기차-자율주행차, 로봇-IoT 등 분야다. 이들 분야는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정부가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의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 규제완화 및 정책 지원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혁신의 저해 요소도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의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과거 중저가 상품을 생산하던 세계공장에서 첨단산업으로 무장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규식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가져온 인간 삶의 풍요와 함께 개개인의 삶이 과연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반문한다. 그는 “인공지능 및 로봇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취업노동의 확산과 소득의 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첨단 기술이 활용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존재한다”고 우려한다. 정규식은 결론의 마지막 문단에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로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노동조합, 시민사회 조직, 소비자 등을 포괄한 새로운 분석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했다. 즉 경쟁적인 산업발전의 측면을 우회하여 시민사회의 연대, 노동자 연대를 통한 초국경적 협력을 제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발표는 내가 맡았다. 나의 문제의식은 국가 주도적 세계화가 신자

유주의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연변지역에서 추진되었던 개발사업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 연변의 “역할(role)”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했다. 1980년대 이후 동북지역은 순차적으로 두만강유역개발협력사업(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광역두만강개발사업(Greater Tumen Initiative), 중국정부가 추진한 창지투개발사업(Chang-Ji-Tu) 등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연변이 지정되었고, 연변은 개발사업이 변화함에 따라 그 역할도 변화하였다. 1980-1990년대는 일명 탈냉전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다. 강고한 사회주의적 체제의 중국(점진적), 소련이(급진적) 선후로 자유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경제개혁을 실시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 두 국가와 인접한 북한도 경제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탈냉전은 동북아시아에서 두만강 유역에 대한 접경지개발협력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탈냉전은 “황금 삼각주”의 건설이기도 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레짐의 국가들은 장기적인 생산과 재분배의 모순,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민생이 파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중국의 경우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한 개혁세력의 구호가 이를 반증했다. 다른 한편 이미 1980년대 동남연해지역 중심으로 된 경제지도의 재편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지역이었던 동북지역의 경제가 활로를 잃었다. 지역 간 격차는 통치의 안정성에 부정적이었다. 바로 이렇게,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 중국 내에서의 지역 간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이 동북지역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요구를 만들었다. 두만강유역개발협력사업은 두만강 인접 3개국인 중국, 북한, 러시아와 남한, 일본, 몽골 등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대자간 개발협력이고, 이 국가들을 조직하는 플랫폼으로써 UNDP가 있다. UNDP는 다자간 협력사업의 의견을 조율하는 특별 기구를 설립하고, 개발 자원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두만강 인접 3국은 자신의 영토를 개방의 창구로 만들어 UNDP가 유치한 자원을 그 곳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 연변은 중국정부에 의해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창구로 설정되었다. 중앙정부로부터 훈춘이 대대적으로 개방되었고, 정책적으로 연변지역을 인접지역 및 인접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개방하고자 했다. 연변은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지하여 지역 인프라를 건설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다. 연변은 중국이 추진한 세계화의 사회경제적 “전방기지( forefront )” 역할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대하는 참여국, 특히 두만강 인접 3국은 개발비용의 자부담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았다(어쩌면 국내 경제사정상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에 목표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지역 개방의 두 축중 하나인 연변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개방창구로서의 역할이 희미해진다면, 동북지역 경제발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동북지역의 고질적인 저성장을 개발을 통해 해결하고, 연변의 개방창구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동북진흥개발과 창지투개발이었던 것이다. 중앙정부는 동북지역에 대한 초대형 개발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연변을 그 속에 편입시켰다. 연변을 대외개방창구로 유지하는 한편 연변과 동북 내륙의 경제적 핵심지역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자 했다. 중국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창춘-지린-연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개발조직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연변에는 자치주라는 지방권력 내에 연길-용정-도문을 하나의 행정적(또는 정치적) 단위로 하는 신규 공산당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이 공산당위원회는 지방권력 내의 지방권력으로써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개발조직의 한 부분으로 편성되었다. 동북 개방의 전초기지인 연변은 동시에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개발정책에 의해 동북 및 중국의 경제중심과 연결된 지리정치적 “국경지역(borderlands)”의 역할이 또 요구된 것이다.

이상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7편의 논문 줄거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질서(또는 냉전구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에서 시작한 학술회의는 냉전의 최전방 경계 중 하나인 오키나와의 모순적인 정체성 문제를 먼저 조명해 보았다. 식민지배, 냉전 등의 다양한 모순이 오키나와 인들을 규정할 때 서서히 등장하는 국민국가는 미완의 국토를 완성해가기 위해 움직

이고 있었다. 육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지리적 국민국가는 해양과 영공의 경계를 통해 육-해-공이 모두 구비된 법적(de jure), 사실적(de facto) 국민국가의 물리적 외피로써 통치 범위가 확정되어 갔다. 하지만 여기서 국민국가 건설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이 지역 질서를 구축한 장본인 중 하나인 미국은 동아시아의 지리적 경계에 더해 그 내부의 사람과 제도의 근대화에도 몰두한다. 대학을 필두로 동아시아의 근대화에 관여한 미국은 공산권의 토지개혁을 통한 인민만들기가 아닌 산업과 기술 지원을 통한 시민만들기를 추진했다. 네 편의 글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지만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즉 전후 동아시아 지역질서로서 정치-지리적 국가의 경계와 사람의 '정체성'은 **규정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역사 속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계약(합리성)을 통해 정체성이 구성되고, 이 정체성에 바탕하여 국민국가가 출현한 게 아니라, 봉건제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식민지를 경험하고, 식민지적 요소가 채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탈식민과 냉전을 동시에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의 현대사가 그려진다. 바로 이러한 역사로 인해 어쩌면 현재 초국경적 협력의 장미빛 전망이 무색해 지는 게 아닐까? 독일 북부의 상인 길드인 한자 동맹의 역사가 적절한 타이밍에 안정적인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형성된 유럽적 정체성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규정된 질서에 노골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중국이었다. 급속한 공업발전을 통해 일거에 미국 버금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발전의 국내, 국외적 역설은 공산당의 통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 역설의 전자는 중국의 정치-경제 엘리트에 대한 수많은 중국 인민의 불만이 거세진다는 것, 후자는 태평양 건너편 미공화당의 집권에 '공헌'하여 이들이 공격적인 대 중국 정치-외교-경제 전쟁을 시작하게 한 것이다. 중국의 개발주의는 비단 미국만 '불편'했던 것이 아니었다. 1990년대 두만강 유역을 공동개발하자고 선언한 이래 인접 국, 즉 과거의 공산주의적 동지국가(comrades) 역시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접경지역 개발협력의 핵심지역인 연변의 역할은 개방과 개발의 전방기지이면서 정

치와 지리적 국경지역이라는 모순적 역할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오키나와인의 모순적 정체성에서 시작된 학술회의는 국민국가 경계의 설정, 미국, 유럽, 중국을 경유하여 북중러 접경지역의 연변에서 막을 내렸다. **규정된 지역질서, 규정된 정체성, 그리고 규정된 지역의 역할, 이것이 학술회의를 통해 정리한 나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학술회의의 대주제로 다시 돌아가 동북아시아 초국경적 협력과 도시간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 도시가 소속된 국가의 냉전, 개발주의, 식민지, 탈식민지,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경제적 변동 속에서 **이 도시들이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어떤 정체성을 구성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만주연구 또는 중국 동북연구에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본다. 첫째, 만주국의 근대화 사업과 국가주도의 중공업화가 1949년 해방 이후 중국의 공업화를 이끌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탈사회주의 중국 동북은 오히려 국유부문과 중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인해 동남부연해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대조되는 낙후지역으로 '재탄생'했다. 비대한 국가부문은 비국가부문, 즉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대가 되었던 것이다. 도시를 중심으로 설정된 공업단지와 공업기지는 공업의 발전 수준에 따라 그 도시의 성격을 결정했다. 이런 의미에서 만주의 도시는 공업의 발전을 통한 현대 및 당대 동북도시의 역할을 이해하는 분석적 시발점이 될수 있다고 본다.

둘째, 만주국 시기의 공업화는 그 자체가 만주국 내부의 지역적 공(산)업 불평등을 야기하였다. 하얼빈-신경-봉천-관동주로 이어지는 공업벨트는 다른 지역의 非공업화를 동반하여 추진되었다. 이 산업지리구조는 해방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공업)발전의 차이는 지방재정의 차이로 이어지고, 지방재정의 차이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정책의 차이로 이어진다. 중국의 사회정책의 철학은 사회치리(社會治理, social governance)다. 한국어로 거버넌스는 협치이지만 중국은 국가가 사회를 관리하고 치료한다는 의미

로 사용된다. 사회치리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지방재정을 통해 공급하기에 공업이 발달한 지방정부와 그렇지 못한 지방정부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치리의 성격을 통해 우리는 만주국 이후 중국 동북의 도시나 지방정부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만주 또는 중국 동북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분포해 있다. 한국의 재만 한인 연구는 1920-30년대, 넓은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 분석 대상 시기는 이후 시간을 뛰어 넘어 2000년대에 상륙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분절된 노동 시장에, 1920-30년대 재만 한인의 후손들이 대규모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과거를 분석했던 민족주의 프레임으로 산업노동력으로 등장한 중국동포(조선족)를 접근하면서 상처받은 연구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 및 사람의 정체성은 냉전기를 거치면서 살벌하게 규정되었기에, 지리적으로 이질적인 곳에서 같은 시기(냉전과 탈냉전)를 경험한 한반도와 중국 한인의 '역할'은 전혀 다르게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2000년대 이전, 1940년대 이후의 역사적 변동 속에서 중국의 한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술회의가 종료된 6시 30분경, 엘리베이터 외벽의 스크린에는 레드벨벳이 “빨간 맛”을 부르고 있었다.

[추가] 이 글은 학술회의 자료집(원광대 HK+사업단, 2019, 『동북아시아 초국경적 협력과 도시 간 교류: 역사, 현실 그리고 미래』, 제12차 NEAD 국내학술회의 자료집)의 원문과 토론문, 그리고 학술회의 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각 발표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발표자의 발표문을 참고, 인용, 옮겨옴을 밝힌다. 또한 원고 분량의 제한으로 토론자의 토론문 내용을 언급하지 못한 점을 밝힌다.

투고일 : 2019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0월 14일